

완도군 '바다숲 탄소 거래 사업' 최다...블루카본 선도

수산자원공단 공모 사업서
전국 20곳 중 6개소 휩쓸어
해조류 흡수량 크레딧 전환
'바다 연금' 기본소득 모델화



완도군이 정부 주관 '2026 바다숲 탄소 거래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바다연금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완도다시마 양식장 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바다숲 조성과 해조류 양식을 통해 흡수되는 탄소량을 가치화하는 '탄소 거래 시범 사업'에 전국 최다 대상지를 확보하며, 해조류 블루카본을 기반으로 한 '바다 연금'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26 바다숲 탄소 거래 시범 사업' 공모에서 전국 20개 사업 대상지 중 가장 많은 6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청산면 모서리를 포함해 총 7개소의 탄소 거래 시범 사업 대상지를 보유하며 명실상부한 블루카본 거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바다숲 조성과 해조류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흡수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탄소 크레딧(가상 화폐)으로 전환해 새로운 수익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바다숲 조성' 유형에 고금면 상정리, 소안면 미라리, 생일면 금곡리가 선정됐으며, '어

업인 블루 크레딧' 유형에는 노화읍 내리, 신지면 월부리, 소안면 동진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마을 어촌계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바다숲(갈피)과 1ha 규모의 해조류 양식 시설을 직접 관리하며 모

니터링을 수행한다.

완도군은 해조류의 탄소 흡수량을 데이터화하고 크레딧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경우, 이를 지역민에게 수익으로 환원하는 '바다 연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이를 전국

민이 혜택을 공유하는 '기본 소득형 모델'로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블루카본 사업의 경제성을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 기존 해조류 양식 수익과 탄소 크레딧 기반 수익을 비교 분석하는 용역을 병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기존 수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확장하는 개념의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되며, 기존 어업 면허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유희 해역이나 양식장을 추가 확보해 전용 양식장으로 단계별 확대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대외적인 인증 절차 대응도 속도를 내며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 가운데, 군은 기존 양식장까지 탄소 흡수원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는 완도 해조류의 탄소 흡수원 가치를 대외적으로 증명할 결과"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탄소 거래 모델을 구축하고, 해조류 블루카본 산업을 선도해 어촌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무안 선거구 경선 끝났는데 변경 '혼란'

투표 못하는 후보·현역 충돌
유권자들, 선택권 제한 '불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및 무안군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선 이후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공천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 확산에 기존 결과가 실제 본선과 맞지 않는다는 '반쪽 경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선거구 조정으로 망운면과 운남면이 2선거구로 편입되면서 정치 지형이 급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경선 이후 이뤄졌다는 점으로, 경선 당시 배제됐던 당원들이 본선에서는 유권자로 포함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다.

후보자 개인 피해도 현실화됐다. 운남면 출신 한 예비후보는 공천을 받고도 자신의 주소지에 투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지역구가 바뀌며 사실상 기반을 잃었다"며 "다른 후보들은 출발선에 서 있지만 나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광역의원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존 지역구가 변경되면서 같은 당 소속 현역 의원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일부는 단기간에 새 지역 유권자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특히 경선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탈락 후보들은 재도전 기회조차 없이 구조적 불이익을 떠안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혼란도 적지 않다.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고려했던 후보가 다른 선거구로 이

동하면서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됐고, 지역 대표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은 "누굴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변경을 넘어 당원 참정권 침해와 공천 절차의 정당성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 특성상, 절차적 하자는 곧 대표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정당의 책임 있는 판단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확정 이후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절차가 뒤바뀌었다"며 "재경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최근 함평군 농업인회관에서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 주관으로 '클린농촌단' 발대식을 열며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 '클린농촌단' 발대...주민 주도 환경정화

농식품부 공모 선정 3억원 투입

함평군이 고질적인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대대적인 정화 활동에 돌입했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 농업인회관에서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 주

관으로 '클린농촌단' 발대식을 열고 쓰레기 불법 소각과 투기, 매립을 근절하는 '3NO 운동' 실천을 선포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3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기존 행정 중심의 수거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단위를 구성해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거둬들이고 환경 감시와 정화 캠페인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클린농촌단은 산불과 토양·수질 오염의 주범인 쓰레기 '안 태우기·안 버리기·안 묻기(3NO)'를 범국민 실천 운동으로 집중 전개한다.

이웃과 다가오는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지역 대표 축제 일정과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을 보낼 계획이다. /함평=기영규 기자

서해해경청, 정책자문위 개선 착수

직무관련자 접대 논란 진상조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부적절한 유착 의혹이 제기된 군산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논란이 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착수했다.

1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군산해경서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보직 해임하고

본청 차원의 진상 조사가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전·현직 서장과 정책자문위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에 따른 책임 문책성 인사로, 제기된 의혹은 일부 자문위원이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으며 서장들이 직무 관련자인 위원들과 골프 및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내용이다.

해양경찰 행동강령상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는 전면 금지돼 있다.

특히 정책자문위원회의 기형적 구성이 논란을 키웠다.

전체 33명 위원 중 전문가는 3명뿐이며 대다수가 지역 기업인들로 채워졌다.

이 중에는 해경의 단속 대상이나 계약 관계에 있는 직무 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해경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 문책하는 한편, 자문위 위원 구성 기준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유착 고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외 관련, 군산해경청은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강진향교 다산부모학교 운영...유대감 강화

내달 16일 2회차 교육 개최

강진군은 전통 문화유산인 향교를 활용해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족 참여형 인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향교 일원에서 서 지역 육아지원센터와 연계한 '강진향교 다산부모학교' 1회차 교육이 30여명의 가족 단위 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2026년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련

된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소통과 관계 형성을 돕는 교육으로 꾸러졌으며, 참가자들은 명륜당 등 전통 교육 공간에서 뮤지컬 체어, 포크댄스 등 공동체 신체 활동을 즐기며 유대감을 다졌다. <사진>

이어 열린 부모 인문학 강의에서는 오석근 강사가 다산 정약용의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해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맺기 방법을 제시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보훈가족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오는 11월까지 건강 체조·토탈 공예 등

영암군은 19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올해 국가보훈부 주관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천100만원을 투입해 보훈가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6일 첫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업은 보훈대상자와 유족 2명

내외를 대상으로 영암군 보훈회관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주 2회씩 진행된다.

고령 참여자들의 신체적 활력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 체조와 토탈 공예 강좌로 꾸러졌으며, 참여자들의 원활한 소통과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증식도 함께 제공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 유공자들의 단절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내 성숙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영암=나동호 기자

영광군, 벼 종자 발아율 무료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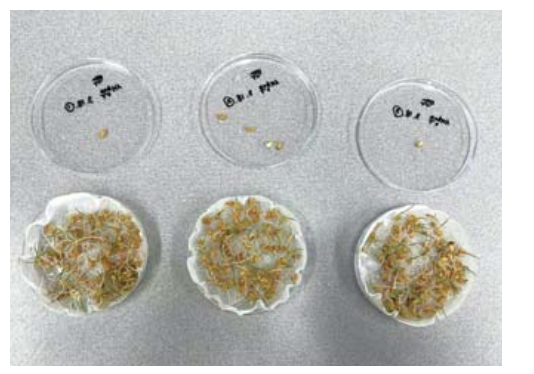
농기센터 접수...파종 여부 판정

영광군은 1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불량 벼씨를 사전에 숙야내고 안정적인 벼 육묘를 돕기 위해 종자 발아율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벼 종자 발아율 사전 검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파종을 앞둔 농가가 깨끗한 봉투에 벼씨 500g(종이컵 2컵 분량)을 담아 센터 작물환경팀에 제출하면 약 2주간의 정밀 검사를 거쳐 파종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해 준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등숙기 동안 지속된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야간 고온 현상, 개시 무늬병 다발생 등의 여파로 올해 종자의 양분 축



적과 총실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정부 보급종과 자가 채종 종자 모두 예년보다 폭증이 발생이 높고 발아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상 발아율이 80% 미만인 종자는 육묘 초기 기상 조건에 민감해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기 때문에 파종량을 조절하거나 우량 종자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영광=김동규 기자